

# 당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안법 개정”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 합의  
원청 도급제한, 산재 제재 강화  
공공기관 평가 개선 등  
발전분야 정규직화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료환경운전분야와 연료환경정비분야의 정규직화 논의에도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가 구성되고,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제한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일 국회에

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힘을 쏟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해 하청업체 산재현황까지 반영토록 했다.

당정은 일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늘려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재해가 많을수록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로 넘기는 대신 원청업체의 산재발생율을 낮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반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갈수록 올라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발전분야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료환경운전 분야 및 연료환경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우 의원은 “연료환경운전 분야는 사별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인데 각 사별로 진행 속도가 모두 다르다”며 “사별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청 통합협

의제도 구성, 각 사별로 같은 속도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연료환경정비분야는 정규직화 3단계로 (정규직화 논의 대상에) 빠져있었는데 이날 말에 3단계 민간위탁정책을 내놓고 그 즉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운전분야와 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당정 간에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정부가 갖고 있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위주정책이 충돌하면서 쟁점이 발생했다”며 “정규직 전환과 민간경쟁체제 간 충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당정 간 합의했고,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당정 협의를 지속해가면서 방향을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특위 위원 선임

평화당 김광수 의원



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책 마련, 제도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광수 의원(정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게 된 김광수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청년층의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라며 “극심한 취업난으로 좌절한 청년층에게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청년세대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가 문제해결은 관심도 없이 당리당락에 위한 정쟁거리로 삼는 행위를 반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김진성기자

## ‘청와대 김태우 고발’ 검찰 즉각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청와대가 19일 전직 특별감찰반원인 검찰 수사관 김태우씨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 등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고발장에는 김씨가 비위 혐의로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김씨가 특별감찰반원인 검찰 업무 내용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보안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추가 징계요청서를 법무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넘겼고, 대검찰청 검찰분부는 기존에 접수된 비위 의혹 검찰과 함께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분부는 김씨가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및 골프 향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반발하면서 본인이 특감반원 시절 유문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일로 말미암아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고 있다. /뉴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2차 회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기재부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오늘 검찰 소환

기획재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 검찰에 소환된다.

19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일 심 의원을 불러 보좌진에게 해킹 등 불법 행위를 지시했는지, 위법 소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뉴스

## 홍남기 “자영업 종합·장기대책 마련”

### 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의 모두 발언

“기본 정책 보완+자영업 생태계 구축 위한 계획 포함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최고 수준 조기 집행...투자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해 온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혁신 대책 최종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에 대한 추가 보완적 성격과 함께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추진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인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홍총리 겸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경제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짚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자영업 혁신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일 (20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계형 창업, 경영 비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와 대형화 온라인 쇼핑물 활성화 및 정보화, 해외 여행객이 많아지는 세계화, 자영업자 내에서도 규모가 커지는 중형 자영업자가 커지는 양극화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

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4차례 내놓으며 현장에서 제기해 온 애로의 상당 부분에 대응해왔지만, 아직 성장 혁신을 통한 근본적·장기적인 정책 체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자영업 매출 선순환, 그리고 자영업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주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자영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매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며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와 삶의 질 등을 고려하는 등 정책 대상을 확고히 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의 안전과 관련해 “지난 17일 확정된 경제정책방향 대로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광역 교통 개선 방안,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정책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혔다”고 평가하며 “투자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된 투자 프로젝트와 규제 혁신 정책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이미 발표된 민간 투자 역시 차질 없는 실행이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 시 직면하는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과제들의 진전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추가 정책을 고민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지자체와의 소통도 강조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접점은 지역이고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지자체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특화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으로 자체 노력하고 있는데, 이같은 노력이 중앙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시너지를 높이도록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지자체들과도 자주 머리를 맞대고 경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경제 활력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부처별로 주요 과제들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일벌·행정 조치를 완수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뉴스

## 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자제 요청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현재 진행 중인 교외체험학습을 급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엔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긴급 부교육감 영상회의

를 소집해 각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개인체험학습을 자제해달라는 얘기다. 교외체험학습에는 학교나

학급 차원에서 단체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과 가족여행 및 개인의 교육목적으로 떠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나뉜다. 이번 대상은 3학년 학생 10명도 학부모 허락을 받아 개인체험학습으로 여행을 떠났다.

교육부는 정교사 이후 고3 학생들의 학사관리 상 태도 점검해달라고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

## 열린의회, 알찬의정

# 제8대 순창군의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제8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 제8대순창군의의회 운영방침

- ▶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 ▶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 ▶ 내실있는 의정활동
- ▶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의회

< 2018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

## 순창군의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 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